

## 체코와 슬로바키아, 과거청산 문제로 주변국들과 갈등 빚어

### □ 2차 세계대전 직후의 과거청산 문제로 외교적 갈등 발생

- 2004년을 목표로 EU(유럽연합) 가입을 추진하고 있는 체코와 슬로바키아는 과거 2차 세계대전 직후 당시 체코슬로바키아 정부가 단행한 독일계와 헝가리계 주민들의 재산 몰수 및 강제 추방 조치와 관련하여 독일과 오스트리아, 그리고 EU 가입을 추진중인 헝가리 등과 외교적 마찰을 빚고 있음.
- 최근 체코의 제만(Milos Zeman) 前총리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 문제와 관련하여 '추방당한 주민들은 모두 나치 부역자였다'라고 발언함으로써 독일, 오스트리아 및 헝가리의 우익 정당들로부터 맹렬한 비난을 받았음. 특히, 우익 민족주의자인 헝가리의 오르반(Viktor Orban) 前총리는 이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 체코와 슬로바키아의 EU 가입 보류를 주장하였음. 이로 인해 체코, 독일, 헝가리 3개국 총리 회담이 무산되는 등 이해 당사국들간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음.

### □ 제1차 세계대전 후 체코슬로바키아의 소수민족 문제 발생

- 1918년 11월 11일, 동맹국 진영을 주도한 독일의 항복으로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 연합국 진영은 1919년 6월 28일 프랑스 베르사유에서 독일과의 강화조약에 조인하였음. 동맹국 진영의 다른 국가들 과도 생제르맹 조약(9월 10일; 對오스트리아), 뇌이 조약(11월 27일; 對불가리아), 트리아농 조약(1920년 6월 4일; 對헝가리), 세브르 조약(8월 10일; 對터키) 등 각각 별개의 강화조약이 체결되었음.

- 이들 조약으로 형성된 전후의 국제질서를 일명 “베르사유 체제”라 하는데, 이 체제는 독일, 오스트리아·헝가리, 오스만 투르크 등 동맹국 진영의 구제국(舊帝國)을 분할하여 폴란드, 체코슬로바키아, 유고슬라비아, 핀란드, 발트 3국 등 다수의 소국가를 탄생시켰음.
- 연합국 진영과 오스트리아간에 조인된 생제르맹 조약에 따라 오스트리아와 공동 왕국을 구성했던 헝가리가 완전히 분리되면서 체코슬로바키아, 폴란드, 유고슬라비아 등 새로운 독립국이 탄생하였음.
- 또한, 이 조약에 따라 수데티(독일어로는 주데텐) 산맥과 체코 보헤미아 서부에 위치한 면적 23,000km<sup>2</sup>의 주데텐란트(Sudentenland) 지방이 체코슬로바키아에 귀속되었는데, 이 지역 인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약 300만 명의 독일계 주민들은 이 결정에 크게 반발하였음.
- 이들 중 헨라인(Konrad Henlein)은 주데텐란트의 독일 귀속 운동을 전개하여, 1933년 1월 30일 독일에서 히틀러(Adolf Hitler)가 이끄는 나치당이 정권을 장악하자 그 해 10월 주데텐 독일인 조국전선(Sudeten-Deutsche Heimatfront)을 결성하였음. 이 조직은 나치의 원조하에 1935년 주데텐 독일당(Sudetendeutsche Partei)으로 개조(改組)하고 체코슬로바키아에서의 독일인의 자치를 요구, 그 해 5월 총선에서 대승을 거두어 체코슬로바키아 의회에서 제2당으로 부상하였음.

#### □ 체코슬로바키아, 뮌헨 협정에 따른 영토 할양에도 불구하고 독일에 강제 병합됨

- 1938년 3월 13일, 독일은 베르사유 조약을 파기하고 오스트리아를 합병하여 제3제국의 오스트마르크 국경주(國境州)로 편입하였음.<sup>1)</sup>

1) 당시 오스트리아인들은 나치즘에 경도되어 독일과의 합병을 열렬히 환영하였음.

이어 4월 24일, 독일의 사주를 받은 주데텐 독일당의 헨라인은 주데텐란트의 독일계 주민에게 완전한 자치권을 부여할 것을 체코슬로바키아 정부에 요구하였음.

- 이에 당시 프랑스·소련과 상호 원조조약을 맺고 있던 체코슬로바키아 정부는 프랑스의 지원을 기대하고 7월 26일 동 요구를 거부하였음. 그러나 오스트리아 합병에서 드러난 독일의 영토 확장욕을 우려한 영국과 프랑스는 체코슬로바키아 정부에게 헨라인의 요구를 받아들일 것을 촉구하였으며, 결국 체코슬로바키아 정부는 9월 5일 헨라인의 요구를 대부분 승인하였음.
- 그러나 헨라인이 더 나아가 주데텐란트의 독일 귀속을 주장하고 히틀러가 이를 지원하는 성명을 발표하자, 대독 유화정책(對獨有和政策)을 쓰고 있던 영국·프랑스 양국은 체코슬로바키아에게 이 지역을 독일에게 할양할 것을 강권하였음. 그 구체적 실행방법을 놓고 의견 대립이 있었으나, 영국과 프랑스는 체코슬로바키아를 설득하여 9월 27일 히틀러에게 그 요구를 받아들이는 타협안을 제시하였음.
- 영국과 프랑스는 28일 이탈리아의 무솔리니(Benito Mussolini) 총리에게 회담의 개최를 의뢰하여, 29일 영국·프랑스·독일·이탈리아가 참여한 뮌헨 회담이 열렸으나, 당사국인 체코슬로바키아는 물론 그의 동맹국인 소련도 초청되지 않았음.<sup>2)</sup>
- 회담 결과 주데텐란트를 독일에, 기타의 소수민족 지방 일부(카르파티아 산맥 부근)를 폴란드와 헝가리에 할양하는 뮌헨 협정(München Agreement)이 체결되었음. 그러나 주데텐란트를 병합한 독일은 이듬해인 1939년 3월 약속을 어기고 체코슬로바키아를 해체 점령한 다음, 9월에는 폴란드를 침공하였음. 이에 영국과 프랑스가 독일에 선전포고를 함으로써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였음.

2) 이 회담은 이탈리아가 주선한 것처럼 꾸몄으나, 실제로는 독일 외무부의 사전 각본에 따른 것이었음.

- 종전 후 주데텐란트는 다시금 체코슬로바키아에 귀속되었으며, 헨라인은 재판에 회부되어 국가에 대한 반역죄로 사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 자살하였음.

## □ 체코슬로바키아의 전후 청산 - 베네슈 법령(Beneš Decree)

- 독일의 체코슬로바키아 점령 직후 런던에서 체코슬로바키아 망명정부를 이끌었던 베네슈(Edvard Beneš) 대통령은 1940년에서 1946년 사이 여러 차례의 개정을 거쳐 체코슬로바키아의 국체(國體) 회복 및 전후 부역자 처벌을 위한 임시 법령을 공포하였는데, 이를 통칭 “베네슈 법령”(Beneš Decree)이라 부름. 체코슬로바키아 국내에서는 동 법령이 1945년 6월 19일 공포되어 전후 청산이 마무리된 1947년까지 유지되었음.
- 2차 세계대전 종전 후 주데텐란트의 독일계 주민 300여만 명 및 카르파티아 산맥 지역의 헝가리계 주민 수만 명<sup>3)</sup>은 친나치 부역행위 여부 규명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재판의 기회를 부여받지 못하고, 베네슈 법령에 따라 주민 전체가 나치 부역자로 규정되어 체코슬로바키아 국적을 박탈당하고 재산을 몰수당했음.
- 즉, 나치에 적극적으로 협력한 부역자들은 사형에 처해지거나 투옥되었고, 독일계 주민은 독일과 오스트리아로, 헝가리계 주민은 헝가리로 각각 추방되었음.<sup>4)</sup> 또한, 독일의 강점기에 독일 및 헝가리 시민권을 취득했던 독일계와 헝가리계 주민들 역시 베네슈 법령에 따라 체코슬로바키아 시민권의 재취득을 거부당하고 전원 추방되었음.
- 다시 츠바다친 도이게 민 헝가리계 주민들은 오늘날까지 체코 및 슬로바키아 정부에 대하여 베네슈 법령의 원천 무효 선언, 당시의

3) 헝가리는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의 동맹국이었으며, 체코슬로바키아의 헝가리계 주민들 역시 나치에 협력했음.

4) 추방된 주민들 중 일부는 분노한 체코슬로바키아인들에 의해 살해되었음.

재산 몰수 및 추방에 대한 공식 사죄와 배상, 고향으로 돌아갈 권리 부여 등을 요구하고 있음.

- 현재 독일과 오스트리아 및 헝가리의 우익 정당들은 유럽에서 고조되고 있는 우익 민족주의 득세 분위기에 편승하여, 체코 및 슬로바키아의 EU 가입에 앞서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첨예한 외교적 마찰을 빚고 있음.

전문연구원 오경일(☎3779-6646)  
E-mail : OKI1122@koreaexim.go.kr